

21세기 미국-유럽 동맹관계의 변환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2009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09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21세기 미국-유럽 동맹관계의 변환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미국과 서방측의 사실상의 승리로 종결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믿었다. 1949년 처음 등장한 이래 나토는 약 반세기에 걸쳐 소련과 그 동맹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성공적으로 보장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나토 역시 그 역사적인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 애초에 동맹결성의 원인을 제공한 위협요인이 사라진 마당에 동맹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동맹의 존속에 대한 반대여론이 매우 높았다.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가 1990년 11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나토는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증언했을 때, 그러한 발언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서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 팽배해 있던 나토 회의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월츠의 그러한 증언이 있은 후 2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나토는 여전히 미국, 캐나다, 터키와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을 포괄하는 동맹조직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나토는 단순히 그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내전에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 탈레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사업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나토가 공동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동맹defense alliance이라는 본래의 존재이유를 넘어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음을 의미한다. 또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나토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불가리아, 루



마니아, 발트해 3국 등 7개국, 그리고 지난 2009년 4월에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동맹국의 숫자를 냉전 종식 이전의 16개국에서 28개국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할과 외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적’主敵 혹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 시대에 나토와 같은 동맹의 역할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그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인해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주장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존재, 2008년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인한 유럽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 증대, 회원국 확대에 따른 동맹의 궁극적인 비전에 관한 견해차의 증가 등은 나토의 미래에 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나토의 미래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오래 창설 60주년을 맞은 이 군사동맹이 ‘외부의 적에 대한 공동의 군사력사용을 위한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동맹의 고전적인 역할 틀을 넘어 ‘다기능, 다목적 동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성공하느냐의 여부이다. 이 질문에 아직 확실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나토의 모습을 희미한 형태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가 지적한바 나토의 세 가지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다 (Betts 2009).

첫째, 나토는 유럽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가들 간의 무력충돌이나 내전 등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즉, 역외域外, out of area 혹은 동맹의 경계선 밖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불안정 요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나토의 주요 임무들 중 하나가 되었다.

둘째, 나토는 점차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체, 베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국가들의 “사교클럽”gentlemen’s club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왔다.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가입하는데 있어서 안보전략상의 이해관계 못지않게 정치적, 이념적, 상징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최근 들어 나토의 동맹의제에서 러시아의 부상에 대한 견제라는 목표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냉전시대에서도와 같은 적대관계가 부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탈냉전시대에서도 러시아는 나토의 “타자”他者로서 근본적인 융합이 불가능한 존재이자 견제와 통제의 대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과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러시아의 공세적인 외교정책노선으로 인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나토의 다기능, 다목적 동맹으로의 변환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가 계속 이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냉전의 종식과 공동의 적의 소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1999년의 코소보 사태에 대한 개입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



고 있는 아프간 전쟁을 나토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의 사용방식에 서부터 동맹의 궁극적인 비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들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사이의 논란 속에서 동맹의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출범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은 양자 간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나토와 유럽연합 사이의 관계설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모두가 그러한 목표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또 이들 사이에 ESDP의 성격과 목표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외교안보분야에서 단일한 국제정치행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이미 유럽연합은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개입하여 재건과 복구, 치안과 평화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부분적으로 나토의 역할과 중첩되면서 나토와 유럽연합의 관계,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갈 등요인이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냉전 종식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의 도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전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제2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나토의 변환과정을 살펴보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예상되는 동맹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제3절에서는 유럽외교안보정책의 등장으로 초래된 나토와 유럽연합 사이의 관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21세기 미국-유럽 관계의 미래를 전망한다.

II. 냉전 이후 NATO의 지속과 변화

2.1 나토의 확대

1990년대 초 미-소 간 냉전 구도가 최종적으로 붕괴된 이후 약 10여 년 동안 나토는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작업에 착수했다. 동맹국들은 나토가 직면하고 대처해야 할 안보위협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는 데에는, 특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동의 적이 사라졌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



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졌다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안보위협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역시 이전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문제는 나토가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였는지 하는 것과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데 나토라는 기존의 동맹체제가 과연 적합한지의 여부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식적으로 처음 시도된 것은 1991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나토전략개념” NATO Strategic Concept에서 회원국들은 나토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 새로운 환경에서 나토는 지극히 “다면적 multi-faceted이고 다향적多向的, multi-directional이어서 예측하거나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또한 이 새로운 안보위협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조직되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안보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맹의 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¹ 나토 동맹국들은 이와 같은 다면적, 다향적, 비예측적, 비조직적인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하면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탈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던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정세불안이 서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이와 같은 예측의 결과 이 시기 나토의 활동은 이들 동유럽 국가들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집중되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Partnership for Peace: Pfp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방정책과 예산의 수립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군에 대한 민간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며,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되었다. Pfp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넘어 대상국가 군사조직의 문화와 군사력 사용 관행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들면, 폴란드는 이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파괴적이고 공세적인 군사문화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Epstein 2005; Adler 2008; Gheciu 2005).

이러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넘어 동유럽의 궁극적인 안정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 지역 국가들을 정식 동맹국으로 받아들여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그러한 조치의 대의와 정당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몇몇 국가들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존재했다. 첫째,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단기간에 구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1999년에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의 경우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나토가 규정한 “성숙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들 동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통한 안보 공공재의 공급에서 사실상 무임승차자의 지위에 머물러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동맹의 확대는 동유럽의 일부 국가를 포용



하는 대가로 그 외의 국가들을 소외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안보위협을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나토의 확대는 옛 소련의 세력권 하에 있던 국가들을 상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러시아로 하여금 나토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할 것이고, 이는 확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위협을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러시아가 동유럽 지역으로의 동맹확대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인 견제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나토의 확대는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서구식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이들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극우민족주의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부추길 뿐이라는 점 역시 성급한 동맹확대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제시되었다(MccGwire 1998).

이러한 모든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1999년과 2004년, 그리고 2007년에 동유럽 12개 국가를 새 동맹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발칸 반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유럽대륙을 포괄하는 동맹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여기에는 동맹의 확대를 통해 주변 지역에서의 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동맹국들 간에 공유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폴란드 등이 1999년 동맹에 가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했고, 부시 행정부의 경우에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다수의 동맹국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 국가의 나토 가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2004년 가입국들의 경우 1999년 가입국들보다도 가입의 전제조건이 덜 충족된 상태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더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Barany 2006).

다른 한편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가입에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국가들의 “클럽”으로서의 나토의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나토는 냉전 종식 이전부터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문명적 연대감으로 결속된 국가들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미 오랜 기간 나토는 단순한 군사 동맹 그 이상의 존재였다. 이러한 문화 공동체, 가치 공동체로서의 나토의 정체성은 소련의 소멸과 함께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동맹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Williams and Neumann 2000; Sjursen 2004).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제공했는데,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서구식 정치, 경제체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완수했거나 완수 중인 동유럽 국가가 나토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거절한 명분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기존 동맹국 정부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2.2. 역외 분쟁과 갈등의 해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신뢰구축에 이은 동맹확대 정책은 이 지역의 체제이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주변국들의 자발적인 변환을 유도하는 소프트한 정책만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불안요인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1993~95년 보스니아, 1999년 코소보)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종청소를 포함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은 파트너십 구축과 동맹국 지위로의 격상 그 이상의 단호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특히 나토는 1999년에 발발한 코소보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역외분쟁의 해결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연합군은 Operation Allied Force라고 명명된 군사작전에서 세르비아의 주요 군사시설과 거점에 대한 공습을 통해 세르비아 민병대의 코소보 철수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개입이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 코소보의 안전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나토가 주도하는 코소보 평화유지군(Kosovo Force: KFOR)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1년 9.11 테러의 발발은 나토에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기했다. 9.11 테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공격은 다른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각 동맹국들은 공격받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제5조를 동맹 역사상 최초로 발동시켰고, 이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은 테러리즘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근거지이자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탈레반에 의해 통치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OEF)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1년 10월 작전이 처음 개시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나토의 OEF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동맹국들이 개별적으로 작전에 참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03년 8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건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엔에 의해 창설된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의 지휘권이 나토에 전격 이양됨으로써 동맹의 OEF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2004년에는 아프가니스탄 군이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까지 ISAF가 활동을 지속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 12월에는 그 이전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ISAF의 활동범위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 코소보에서의 군사작전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은 나토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Sperling and Webber 2009). 1999년 이전까지 나토는 그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동맹에 불과했다. 파트너십과 동맹확대정책도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냉전 종식 이후 나토의 존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



수해온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는 2000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미국의 나토확대정책은 이 동맹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해온 미국이 냉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감행한 매우 “어리석은 짓”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의 반발을 반드시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Waltz 2000). 하지만 코소보 전쟁 이후 그리고 2003년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ISAF의 지휘권을 넘겨받은 이후 나토의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나토가 방어동맹이라는 기존의 정체성과 더불어 동맹의 경계선 외부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안보제도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나토의 정체성은 기존 나토의 정체성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항상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특히 역외분쟁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 사이의 군사력 격차와 전략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애초에 코소보 내전에 개입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코소보의 전략적 중요성과 자칫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국내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개입을 꺼려할 이유는 충분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미국의 코소보 개입이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한 분쟁과 위기상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영국을 비롯하여 나토의 유럽동맹국 다수는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개입을 옹호하는데 적극적이었다.² 결국, 1993~95년의 보스니아 내전에 이어 코소보 내전에의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칸반도는 유럽대륙 내에서 항구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토를 통한 개입 이외에는 다른 개입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박한 인식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개입을 지지하게 했다.

군사개입이 일단 결정되고, 동맹국들이 나토창설 이후 처음으로 실제적인 군사력 사용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특히 그동안 개입을 열성적으로 옹호해왔던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냉전시기가 이래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군사비를 큰 폭으로 삭감해온 유럽동맹국들이 군사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인 나토 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르비아 공습을 위한 총 출격횟수의 6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야 했던 미국 측 정책결정자들 역시 유럽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합의(consensus)를 통한 나토의 정책결정과정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져야 할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설정된 공격목표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나토 연합군의 공습계획에 제동을 걸었으며 미군 지휘관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코소보 전쟁에서 형성된 나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프간 전



쟁에서 가능한 한 나토를 개입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수 동맹국들 간의 복잡한 합의를 통해 움직이는 나토의 전쟁 참여가 전혀 반갑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선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동맹 역사상 최초로 동맹조약 제5조가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의 전쟁 참여를 배격하고, 동맹국들의 도움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받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약 2년 뒤에 미국이 이라크에 더 큰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나토에 ISAF의 지휘권이 이양되었고, 이후 나토의 유럽동맹국들은 ISAF 병력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면서 활동을 주도해 왔다.³ 하지만 미국의 유럽동맹국들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존재한다 (Nevers 2007, 50-56).

첫째, 나토가 지휘권을 넘겨받은 후 ISAF는 만성적인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다. 2008년 현재 약 52,000명의 나토군이 ISAF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데, 이는 나토가 원활한 군사작전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병력의 80~8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2006년 7월 이래 전투양상이 격렬해짐에 따라 병력증원이 긴급하게 요구되었고, 그해 11월에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증원이 결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⁴ 이러한 사정은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유럽 동맹국들의 병력증원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이들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지상군 병력 중 70퍼센트 이상이 낡은 장비와 훈련부족으로 인해 해외로 파병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Hamilton et al. 2009). 단적인 예로 2001년 독일정부는 자국병력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공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군용 수송기를 임대해야만 했다.

둘째, 나토의 몇몇 유럽 동맹국들은 파병된 자국병력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단서조항(national caveats)을 부가했다. 예를 들면, 독일정부는 자국군의 활동범위가 카불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폴란드 정부는 탈레반과의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남부지역에 자국군이 배치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2008년 현재 총 62개의 단서조항이 ISAF에 부가되었는데, 이는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손실이 일부 국가의 병력에 집중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했다.⁵

셋째,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탈레반 세력에 대한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유럽동맹국들은 국내질서와 치안의 안정적인 유지에, 즉 현상유지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동맹국들 간 군사력 사용에 관한 전략적 견해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2002년의 NSS에서 잘 드러났듯이) 예방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통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



는데 집중해온 반면, 유럽동맹국들은 주로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능력(response capabilities)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따라서 아프간 전쟁에 파병된 유럽동맹국들의 병력은 주로 평화유지와 구호, 재건사업에 더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다. 탈레반의 반격이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지휘관들에게 이러한 기능들은 그다지 유용해 보이지 않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코소보와 아프간 전쟁은 그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나토의 위상이 재확립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이 두 전쟁을 계기로 ‘역외 분쟁과 갈등의 중재와 해결’은 나토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2008년 현재 코소보에는 12,498명의 나토군이 주둔해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총 72,314명의 병력이 나토의 지휘 하에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에서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측 동맹국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나토를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서 보조적인 역할 이상을 담당할 동맹으로 인정할 이유를 발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의 능력의 측면에서, 정치적 의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고려할 때 나토는 결코 최선의 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유럽 동맹국들 또한 두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의 효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우선 유럽 동맹국들은 두 전쟁을 통해 드러나고 확인된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사력의 절대적인 양과 질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결코 대등한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럽 동맹국들은 잠재적인 위협의 원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도 불사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 영역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도달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인식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엘리트 차원과 일반대중 차원 양쪽 모두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코소보 전쟁 이후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럽동맹국들은 또한 유럽 외교안보전략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하여 나토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나토와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의 주체로서의 유럽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 간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21세기의 변화된 전략 환경 속에서 나토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 동맹의 장기적인 비전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찾아질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글로벌 나토”⁶ global NATO라는 용어로 정리될 수 있다(Daalder and Goldgeier 2006).⁶ 이는 더 이상 유럽의 안전과 안정의 보장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보기에 오늘날의 세계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안보위협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럽 이외의 여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나토의 역할범위 역시 이러한 변화된 전략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 유럽인근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체제와 이념을 같이 하는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 등 타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를 보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맹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안보위협과 동맹의 지리적 범위에 있어서 나토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포괄하는 세계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동맹국들은 글로벌 나토의 비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맹의 '현상유지'쪽에 더 무게를 두어 왔고, 동맹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역외활동 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일체의 역외활동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역외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긴급한 상황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군사적 수단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2년 프라하 나토 정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창설된 25,000명 규모의 나토대응군(NATO Response Force: NRF)을 아프간 전쟁에 투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 독일 등이 NRF의 사용범위는 고강도 분쟁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사실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Noetzel and Schreer 2009, 218). 프랑스, 독일 등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들 국가들은 나토가 미국 외교안보전략 상의 목표 달성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둘째, 이들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 나토의 강화보다는 유럽연합을 통한 독자적인 유럽외교안보정책의 추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공동의 적, 특히 러시아에 대한 방어동맹이라는 전통적인 나토의 역할에 보다 큰 중요성이 부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들 동유럽 국가들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유에서 러시아에 대한 '본원적인' 경계심을 지녀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말 이후 푸틴 통치 하의 러시아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 남 오세티아(South Ossetia) 문제를 둘러싸고 발발한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전쟁은(그리고 러시아가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필요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그루지야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실은) 동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오래된 불안감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로부터의 잠재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동맹의 자원을 역외활동보다는 전통적인 영토방어에 투입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겠다(Noetzel and Schreer 2009, 216).

현재 동맹의 역할과 위상과 관련하여 나토 동맹국들이 2~3개 집단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



이는 가운데 나토가 이들 사이의 현실적, 잠재적인 갈등과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종류의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나토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름대로의 변신을 모색해 왔다. 우선 나토는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리적 외연을 크게 확장함과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의 체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고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둘째,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 동맹에 직, 간접적인 안보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역외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나토의 역할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각각의 경로 모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2009년의 나토는 1989년의 나토와 비교할 때 외관과 내용에서 놀라울 정도의 변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 경로 모두 일정한 문제점을 초래한 것 역시 사실이다. 선부른 동맹확대정책은 러시아의 반발을 가져왔다. 역외활동의 비중 증가는 미국과 유럽동맹국들 간의 분열을 가져왔다. 전자의 경우 아직 그 전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상황으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양측 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달았고 많은 이들이 위기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근원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서로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 양측 모두 나토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 양가兩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는 데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나토는 각자의 외교안보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양측 모두 이 동맹의 의의와 효용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발간된 CSIS 보고서 역시 현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지만 많은 동맹국들에게 점점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Hamilton et al. 2009, 21). 나토가 처한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의 발전 전망을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 관계의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2.3. 오바마 미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의 전망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을 얼마 앞두고 미국 민주당 후보 자격으로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무려 20여만 명의 청중이 운집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악화된 미국과 독일,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오바마의 당선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를 바라는 대다수 유럽인들의 희망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열렬하게 터져 나오던 청중들의 환호성은 후보자가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이것을(아프간 사태의 해결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아프간인들은 우리의 군대와 여러



분의 군대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호소한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유럽인들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호의와 친밀감의 한계를 생생히 보여줌과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나토의 위상과 역할 확립을 위한 모색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CSIS 보고서에서는 아프간 사태의 해결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급하게 해결을 요하는 나토의 두 가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Hamilton et al. 2009, 14-19). 이 중 전자의 과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과제 제1순위로 강조해 왔고, 또 최근 들어 탈레반의 반격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2일 4,000명의 미 해병대가 탈레반의 핵심 본거지인 헬만드 주에 투입되는 ‘칸자르(단검)’작전의 착수를 전격적으로 명령함으로써 아프간 사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그 성공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이 작전은 2001년 미국이 아프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래 최대 규모이자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 해병 작전 중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또한 아프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9년 4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나토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머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알 카에다를 소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에 위협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럽 나토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유럽 동맹국들은 약 5,000여명의 병력을 증파하기로 합의했고, 아프간 군대와 경찰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4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000명의 병력 중 3,000명은 8월 달에 실시될 아프간 총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병된다는 단서조항이 부가되었고, 또 미국정부가 아프간 파병 미군의 숫자를 현재의 38,000명에서 68,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럽 동맹국들이 제안한 증원규모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New York Times April/5/2009). 대다수 유럽인들은 아프간 사태의 해결이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호소에 대한 이와 같이 냉담한 반응은 아마도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마드리드와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테러위협은 대부분 유럽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와 탈레반에 대한 공격이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Nevers 2007, 63). 여기에 더해서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는 유럽 국가들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유럽 국가들이 파병을 위해 가용한 병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역외갈등과 분쟁의 해결자로서의 나토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대해 지극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많은 유럽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이전 부시 행정부 시절 경색되었던 미국-유럽 관계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가 아프간 전쟁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유럽 동맹국들의 호응에 미국정부는 비교적 차분히 반응하고 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간 전쟁과 관련하여 유럽의 나토동맹국들에게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와 같은 조치들이 유럽인들에게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스트라스부르 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발간된 몇몇 정책 보고서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에게 병력증파 대신 아프간의 재건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인력과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Keohane 2007). 따라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능력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나토의 효용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전 행정부 시절에 형성된 인식을 (어느 정도 완화된 형태로나마)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바마 행정부 역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상존한다는 점을 가감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의 청중들이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 오바마에 열광하면서도 그 열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듯이, 이전 부시 행정부의 고압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외교안보정책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집권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 역시 미국-유럽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아프간 사태의 해결이라는 과제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나토의 주도로 순조롭게 완수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아 보이는 반면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관계는 나토의 회원국 확대 정책이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진행되던데 그 근본원인이 있고, 그러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미국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지금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관계에서 “리셋버튼” reset button 을 누르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관계개선의 전망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긍정적이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



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야 전쟁 당시 그루지야가 보여준 행태는 코카서스의 이 작은 국가가 나토의 가입기준에 (특히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을 군사력을 사용하여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참 미달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Vasconcelos 2008). 둘째,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 미국 간 핵심쟁점들 중 하나인 MD를 동유럽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이전 부시 행정부에 비해 훨씬 덜 적극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7월 6~7일에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 문제를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는데 동의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최근 경제위기는 러시아로 하여금 미국과 나토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있다(Keohane 2007). 이러한 이유들이 결합된 결과 지난 7월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무기감축START-1 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하고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7년 이내에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의 결과 중 오바마 행정부에 특히 고무적인 성과는 러시아가 미국의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군의 군장비와 병력이 러시아 영토를 육로로 통과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운반되도록 허용하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회담이 개최되기 얼마 전에 라트비아의 리가를 출발한 미 군용장비가 러시아를 가로질러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기도 했다.

나토와 러시아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초래된 주된 책임이 미국에게 있었고,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나토의 유럽동맹국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을 대체로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와 무역, 투자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개선은 더욱 환영받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은 러시아 전체 수출입 물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러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외투자자이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에 따른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완화가 안정적으로 계속되리라고 확신할 이유는 없다. 러시아가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 다시 미국과 나토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앞서 언급했듯이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토가입과 유럽연합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의 존재도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초 독립을 쟁취한 구소련공화국들 중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러시아와 역사적, 언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만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Barany 2006, 174).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의 추이로 판단해 보건대 러시아 문제의 해결은 아프간 문제의 해결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프간 사태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고, 러시아 문제의 해결 전망은 상대적으로 희망적인 현 상황에서 나토의 좀 더 장기적인 발전전망에 관해서는 어떤 예상을 내놓을 수 있는가?



우선, 각 구성원의 외교안보전략에서 나토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상대적인 국력의 쇠퇴로 인해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 외교정책노선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아프간 전쟁 등 주요 안보이슈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비전 역시 그러한 협력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를 통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에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토는 자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 또 군사적인 능력과 전략적 비전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 지나치게 큰 간극으로 인해 조화로운 협력관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하다. 또 미국이 보기에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우선시하는 나토의 정책결정방식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럽 이외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시급한 개입과 해결을 요하는 사태들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에 많은 관심을 쏟을 이유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오 오늘날의 나토는 유럽의 안전보장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방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자신들을 ‘연루’시키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자주의적 원칙과는 거리가 먼)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보다 최근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군을 무려 40여년 만에 나토의 지휘체제로 재통합시키겠다는 획기적인 (그리고 그만큼 프랑스 국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결정을 내림으로써 나토의 부활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⁷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나토의 위상을 강화시키겠다는 동기보다는 나토가 프랑스와 여타 유럽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제동을 걸겠다는 동기가 더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Herpen 2008).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을 통한 유럽의 독자세력화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나토의 역할 및 위상 강화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이와 같이 나토에 부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양측은 결국 ‘나토의 글로벌화’ 여부를 두고 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나토의 역할과 지리적인 외연의 두 측면에서 글로벌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기능과 조직의 측면에서 나토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Marshall 2009).⁸ 지난 2009년 7월 7일 1999년에 작성된 전략개념(Concept)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개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서두연설에서 나토 사무총장 잭 데 후프 셰퍼(Jaap de Hoop Scheffer)는 미국이 주장하는 글로벌 나토의 비전을 지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새로운 전략개념이 안보의 안과 밖 구분을 종식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구화로 인해 국경선이 존재하고 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의 영토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토 밖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방어하는 것이고, 이들은 영토와는 달리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Scheffer 2009).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나토의 글로벌화가 결국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 간의 대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토는 글로벌화보다는 러시아와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수립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⁹ 프랑스 국방장관 역시 43년 만에 자국군을 나토의 지휘체계에 통합시키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은 나토의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나토의 비전에 대한 반대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간의 견해 차이는 나토의 장기 전망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결국 나토의 무력화 혹은 붕괴를 가져올 것인가? 아드간 전쟁을 둘러싼 현재의 대립과 갈등은 그러한 무력화와 붕괴의 전조로 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양자 사이에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나토가 무력화되거나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 그 파급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과 유럽 간의 타협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패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타협의 성사에 오히려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나토가 안보동맹인 만큼이나 가치동맹, 문명동맹이라는데 있다. 나토의 분열 또는 붕괴는 단순히 안보이익을 위해 결집된 동맹의 실패가 아니라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자본주의, 인권의 가치 등을 신봉하는 국가들 간 연대의 균열로 간주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의 종식”, 심지어는 “서구의 종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세계의 다른 문명, 문화권과 비교할 때 차이점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Ash 2005). 나토의 실패는 대서양 양쪽을 연결하는 오래된 연대의식에 치명타가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미국, 유럽 양측의 인식이 나토의 변환에 관한 타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지난 20여년의 갈등과 각축의 결과 미국과 유럽 양측은 오늘날의 나토가 각자의 안보 전략 상에서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갖는다는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합의는 미국과 유럽이 나토의 미래에 관한 공동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서로에 대해 더 이상 환상을 갖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자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차분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오늘날의 세계에는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구성원들 간의 손쉬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이슈들 이외에도 많은 안보이슈들이 존재한다. 이 안보이슈들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의 이슈와 비교할 때 시급한 해결을 요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쟁점들이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일정하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맹 변경지대의 안전보장이나 반테러작전을 위한 협력, 재난구호, 에너지안보, 사이버 안보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는 새로운 안보이슈들에서 나토 구성원들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Hamilton et al. 2009, 28-32).

넷째, 나토는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안보현안들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견해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상설화된 안보포럼, 정례화된 대화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에 더해서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협력에 대해서 적어도 이전 행정부보다는 훨씬 개방적이라는 점 등이 미국-유럽 간 타협의 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나토의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예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시대 이후 나토는 역외분쟁의 중재자 혹은 해결자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동맹구성원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고, 코소보 전쟁을 거쳐 아프간 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의 견해와 입장차이가 불거지게 되었다. 아프간 전쟁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양자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미국과 유럽 양측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타협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와 이해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겠지만 나토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기능, 다목적 안보제도로의 변환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예측의 일반화를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아프간 전쟁의 향후 전개에 따라 양측 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러시아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무한정 고수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거둘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의 진전 여부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세력화에 성공할 경우 나토와 경쟁하는 유럽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에 앞서 먼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독자세력화에 나선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I. 나토와 유럽연합: 협력 또는 경쟁?

3.1. 유럽연합의 국제정치행위자로의 부상: ESDP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1990년대 초 이래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을 통한 독자세력화를 모색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국제정치행위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최초의 계기는 나토의 경우와 유사하게 냉전의 종식과 함께 마련되었다. 19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외교안보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담보 상태에 머물러 오던 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냉전질서의 종식으로 초래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미국의존적인 안보환경을 재고하게 되었다. 둘째, 독일통일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으로 촉발된 새로운 불안정 요인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많은 이들은 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1980년대 중반 이래 많은 진전을 이룬 경제분야 통합의 논리적인 귀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경제분야의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고, 정치통합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CFSP의 채택이 외교안보분야협력의 급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9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유럽인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음에도 실제적인 협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영국에 의해서 주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협력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고, 유럽의 독자적인 세력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또한 유럽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영국은 공동통화체제EMU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과 더불어 유럽연합 전체 방위비 지출의 압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영국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CFSP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다.¹⁰

이런 상황에서 1998년 영국의 블레어 수상과 프랑스의 자크 시락 대통령 간에 유럽연합의 외교안보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흔히 생 말로 선언St. Malo Declaration으로 불리는 이 합의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주의 구호활동, 평화유지 활동, 위기대처를 위한 전투병력의 투입 등 1992년 유럽 주요국 사이에 합의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긴밀히 그리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생 말로 선언은 1999년 쾰른 유럽연합정상회담에서 결의된 유럽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의 출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ESDP의 ‘출생증명서’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떤 이유에서 유럽연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기존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지하게 되었는가?

영국의 태도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정치무대에서 영국의 역할에 관한 토니 블레어 수상의 개인적인 신념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생 말로 선언 이후이긴 하지만 코소보 사태와 관련하여 행한 한 연설에서 블레어 수상은 “국제 공동체의 새로운 원칙”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대량학살 행위는 결코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Blair 1999).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러한 견해는 영국이 좀 더 윤리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총리의 신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블레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미국에 편승하는 기존 정책 대신 뜻을 같이 하는 유럽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둘째, 보다 중요한 이유로, 영국정부는 유럽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유럽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영향력 회복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자 했다.

결국 1999년 ESDP의 출범이야말로 유럽연합이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단일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는 진정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정부의 인식변화 이외에도 이를 가능하게 한 몇 가지 요인들을 더 꼽을 수 있다(Ojanen 2006). 우선, 회원국 확대에 예상되는 유럽연합의 응집력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견해가 강화되었다. 둘째, 유럽에서 안보-방위 분야는 이제 더 이상 국가정체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영역이 아니라 ‘저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오늘날 유럽에서는 안보의 문제가 외침에 대한 영토방위라는 측면보다는 소수



의 잘 훈련된 병력을 동원한 위기대처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안보문제에 대한 최종통제권을 주권국가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는 대신 시장정책이나 통화정책에서처럼 국가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Edmunds 2006). 셋째, 유럽연합에 의해서 일정 부분 부추겨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토의 진화에서 코소보 전쟁의 발발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ESDP의 출범과 진화에 있어서도 1999년 초의 이 전쟁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다른 무엇보다도 ESDP를 탄생시킨 1999년의 쾰른 정상회담이 전쟁이 끝나고 불과 넉 달 후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앞 절에서 지적했듯이 나토의 진화에서 코소보 전쟁은 동맹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대규모 공동 군사작전임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 능력과 의지의 간극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사실 이들 중 다수가 나토의 동맹국이기도 했지만) 코소보 전쟁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었다. 한 유럽의회 의원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밝혔듯이 전쟁은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유럽인들에게 환기시켰다(Brok 1999).¹¹ 즉, 냉전 종식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립시켰다. ESDP의 출범은 이러한 자각 위에서 가능했다.¹²

1999년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ESDP는 조금씩 그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국제정치행위자로서의 정체성 역시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3년 12월 유럽이사회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모델로 하는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 ESS)을 채택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회원국들은 4억5천만 명의 인구와 전 세계 GNP의 1/4을 차지하는 유럽연합이 “필연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행위자”(global player)일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분쟁지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선언했다(European Council 2003). 신속대응군도 만들어졌다. 1999년 헬싱키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신속대응군(European Rapid Reaction Force)의 창설이 처음 결의되었고, 2004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주도로 5~10일 이내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1,500명 규모의 전투단(battle group) 형태로 수정되어 2007년 1월 1일자로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선언되었다. 2003년 3월과 6월에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이 마케도니아와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효과적인 작전을 펼침으로써 유럽연합의 군사작전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평화유지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 전반기까지 총 22회의 군사작전을 주도했고, 그 중 13개 작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¹³ 2007년 12월에 서명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일종의 ‘유럽연합 외무장관직’(공식명칭은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신설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실제 발효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난 10년 동안의 눈부신 성과와는 별도로 ESDP는 많은 문제점 역시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토 유럽동맹국들의 경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수준이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유럽연합 회원국의 총 방위비 지출액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방위비 지출액의 경우 2006년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81퍼센트를 지출했다. 같은 해 미국은 4.06퍼센트를 지출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군사력의 현대화에서도 그다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냉전 종식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만여 대의 전차와 2,5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데서 잘 드러난다. 전차와 전투기는 인도주의 구호와 평화유지군 활동 등 유럽연합의 개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을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체 방위비에서 신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미국이 전체 방위비에서 9퍼센트 정도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데 반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고작 1.5퍼센트 정도만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Menon 2009; Toje 2008a, 25). 이외에도 유럽연합 전체 병력의 70퍼센트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해외파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다.

낮은 방위비와 그에 따른 불충분한 군사력으로 인해 해외파견 유럽연합군의 행동반경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빈번하게 불명예스러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파병병력은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인해 위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대신 현상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파병지역에서 위기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격적인 철수를 단행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비와 병력 문제 못지않게 각 회원국 정부의 의지 결여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긴급한 인도주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인종학살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유럽연합은 유엔이나 나토 등에 비할 때 개입을 주도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는데 실패했다. 주요 회원국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서로에게 그리고 미국과 나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Toje 2008b).¹⁴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ESDP의 효율적인 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주요 회원국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견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의 경우 최근의 태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여 왔고, 나토의 글로벌화 역시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유럽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창하면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 때문에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독일은 과거로부터의 유산으로 인해 군사력 사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분명한 점은 이들 세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ESD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이한 외교안보정책 전통을 가진 이 세 국가의 행동통일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부재한 가운데 ESDP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다.¹⁵

유럽연합이 유의미한 국제정치행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시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ESDP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작전수립능력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토의 SHAPE(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에 해당하는 작전본부(Operation Center, OpsCen)의 역할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들 간 정책조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회원국들 중 일정한 의향과 능력을 갖춘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좀 더 진전된 수준에서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다. 이는 일종의 ‘소수정예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취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와는 약간 다른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6개 회원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외에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 6개국의 방위비가 적어도 GDP의 2퍼센트 수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이 단서조항으로 추가되었다.¹⁶ 각 국가가 1만 명씩 병력을 제공하여 총 6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Toje 2008a, 22-25).

이러한 방안들의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또 설령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외교안보정책과 국제정치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조망을 시도한 최근의 한 논문에서 결론내리고 있듯이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 유럽연합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정치무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Klotz 2009).¹⁷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질적, 양적으로 현저하게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의지가 대다수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유럽연합이 비대해지고 회원국들의 구성이 다양해진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지금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내부결속에 힘써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ESDP를 통한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는 여전히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특히 이에 적극적이다. 당면



한 예상할 수 있는 바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관료들의 지지도 확고하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독자세력화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하다. 이미 수년째 70퍼센트 이상의 유럽인들이 공동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쟁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강화된 유럽인들의 반미국 정서로 인해 “미국이 아닌 유럽” Europe-as-not-America의 정체성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독자세력화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는 나토의 역할과 위상을 둘러싸고 이미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미국-유럽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은 이미 CFSP와 ESDP 초기부터 유럽의 독자세력화가 제기하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주목해왔다. 특히 미국은 ESDP가 나토의 응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ESDP의 최종적인 목표가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잠재적인 위험성은 이미 나토와 유럽연합 ESDP 사이의 관계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두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부분적으로 중첩됨으로써 갈등과 경쟁의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두 제도 간 갈등과 경쟁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국-유럽 동맹 관계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3.2. 나토-ESDP 관계와 미국-유럽관계의 진단과 전망

우선 보다 경험적인 수준에서 나토와 ESDP의 공존이 초래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현재 총 21개의 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유럽연합에 동시에 가입해 있다. 물론 나토와 유럽연합 어느 한쪽의 회원국인 국가들의 수도 상당하다. 나토 회원국 중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터키 등이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 중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로는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¹⁸ 2002년 12월 나토와 유럽연합은 ‘베를린 플러스’ Berlin Plus라 명명된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인도주의적 구호나 평화유지의 목적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 개입할 때 나토의 정보수집과 작전수립능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나토가 보유한 각종 장비를 이용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수시로 협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제도 간에 잠재적인 갈등의 여지는 언제나 남아있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2002년 12월 나토와 유럽연합은 양자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로 정의한바 있다.¹⁹ 실제로 당시에는 양자 간 평화적인 공존과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불충분한 군사력 수준을 감안해 유럽연합은 군사작전이 완료된 후 재건과 복구, 치안유지 등의 임무를 맡거나 신속한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으로 단기간에 임무가 완수될 수 있는 저강도 위기상황에 개입하고, 대규모 병력투입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고강도 위기에 대한 개입은 나토가 전담하는 식의 ‘노동 분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 개입의 지리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은 나토가 비교적 관심을 덜 갖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중복개입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Duke 2008). 실제로 이러한 분업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9년 현재 유럽연합은 전 세계 13개 ‘경량급’ 분쟁지역에 비교적 소수의 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유럽연합군은 나토군에 비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상당수가 주둔하고 있다. 반면, 나토는 현재 5개 지역에 병력을 파견 중인데, 그 중 아프가니스탄과 코소보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토와 유럽연합은 점차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나토신속대응군NRF과 유럽신속대응군ERRF 사이의 경쟁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1999년 헬싱키에서 유럽연합 신속대응군의 창설이 결정된 이후 2002년 12월 나토의 프라하 정상회담에서 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제안으로 나토 신속대응군의 창설이 결의되었다. 미국은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림스펠드의 국방성이 추진하는 군사력의 “변환” transform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정당화하려 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유럽신속대응군의 존재를 감안하면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NRF는 유럽신속대응군과 ESDP에 대한 미국의 견제시도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 NRF의 창설이 결정되고 불과 몇 달 후에 열린 영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신속대응군 창설에 관한 기존의 계획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전투단battle group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그 자체로 NRF 창설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나토와 ESDP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게 했다(Cornish 2006).

나토-ESDP 경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앞서 언급했던 유럽연합의 작전수립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프랑스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의 시도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베를린 플러스 합의에 따라 주요 작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나토 SHAPE의 도움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러한 관행이 ESDP의 나토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연합의 작전본부OpsCen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유럽연합 상설작전본부’EU Operational Headquarters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Hofmann 2009, 47).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EUHQ의 설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 군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작전수립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작전본부 설치논리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토와 ESDP 두 제도 간 경쟁의 논리가 미국-유럽 간 관계설정의 논리와 맞물리면서 찬성의 목소



리가 반대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 두 제도 간의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면서 노골적인 “영역싸움” turf battle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ESDP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재건과 복구, 평화유지, 치안업무 등의 영역으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 역시 유럽연합이 고강도 분쟁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나토는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군의 다르푸르 개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또 지난 2003년 프랑스가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개입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ESDP가 고강도 분쟁에서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려는데 있었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Hofmann 2009, 48-49). 미국, 캐나다와 대다수 유럽 국가들을 포괄하는 군사동맹, 안보동맹으로 시작한 나토와 시장통합을 위한 경제공동체에서 비롯되어 외교안보분야로 그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유럽연합 ESDP 사이의 이와 같은 경쟁과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일반논리에 따라 두 제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이 나토의 존속을 주장한 것은 유럽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 기반 위에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ESDP의 존재를 용인하는 것은 전후 재건과 복구, 치안유지 등 미국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유럽 국가들이 맡아주기 바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게 군사력 증강과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아마도 만에 하나 유럽의 군사력 증가 폭이 미국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선을 넘어설 경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미국이 유럽연합의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해 온 것도 회원국 확대를 통해 유럽연합의 응집력을 떨어뜨리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미 행정부들이 일관되게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토가 미국의 유럽 지배를 위한 도구라면 ESDP는 그러한 미국의 시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함께 ESDP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 역시 지닌다. 심지어는 1980년대 말 이래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유럽통합 자체도 미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다극체제의 도래와 함께 생존을 위한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ESDP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Layne 2008; Peters 2004; Posen 2006; Pape 2005; Col-lard-Wexler 2006).

위의 설명에 따르면 나토와 유럽연합 ESDP 사이의 경쟁과 갈등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무



정부적인 국제정치체제의 속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즉, 모든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국제체제 내에서 특정 행위자로의 힘의 집중을 견제하고, 또 그러한 견제시도를 견제하는 것은 필연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나토와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도 이러한 지배-견제의 동학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체제 자체의 속성에서 기원하는 동기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미국-유럽 관계의 현상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영국과 프랑스가 생 말로에서 외교안보분야에서 유럽연합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합의했을 때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親유럽적’이라고 일컬어지던 클린턴 대통령이 블레어 총리가 “지나치게 프랑스적” too French으로 행동했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한 사실, 2003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정상들이 모여 유럽연합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했을 때 평소에 유럽 국가들의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오던 미국정부가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실 등은 아마도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소보 전쟁에서 미국과의 엄청난 군사력 격차에 충격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어떤 이유에서 ESDP를 통한 독자세력화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질문 역시 위와 같은 시각에서 더 잘 답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생존’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결론짓기에는 양측이 그동안 쌓아온 제도적인 실천과 관행, 변화된 인식과 규범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미국과 유럽은 현실주의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에 대해 전쟁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적어도 미국과 유럽은 상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 중 군사력의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배제한다는 강력한 묵계를 공유하고 있다. 일종의 ‘無전쟁 공동체’ no-war community인 셈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과 유럽에 공통적인 문화와 역사,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의 가치는 이 ‘공동체’를 더욱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른바 ‘안보공동체’ security community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측이 안보를 위한 군사력의 적절한 사용방식과 그 효용에 관해 매우 상이한 견해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나토와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과 경쟁관계, 그리고 나토 내에서 미국과 유럽동맹국들 사이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는 군사력을 보다 신중하게 이용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 예방전쟁을 포함한 선제적인 공세를 정책대안에 포함시킨바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이념적으로 보다 유화적인 새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강경노선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선제적인 공세정책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오래된 전통에 속하며, 따라서 새 행정부 역시 필요한 경우 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이슈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른바 ‘민간외교’ civilian diplomacy를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여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가용한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우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²¹ 이러한 결과 미국은 군사력 사용방식의 과격함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그 소극성으로 인해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적어도 군사력의 사용에 관한 한 “미국인들은 화성Mars에 살고 유럽인들은 금성Venus에 살고 있다”는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의 유명한 비유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케이건에 의하면 유럽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성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건은 유럽인들이 금성에 살면서 국제정치의 칸트주의적 비전을 추구하는 것은 군사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유럽인들이 민간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력의 신중한 사용을 옹호하는 것은 빈약한 군사력으로 인해 강요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칼립소 니콜라이디스Kalypso Nikolaidis는 케이건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 한 논문에서 유럽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금성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칸트주의적인 선택” Kantian choice을 했다는 것이다(Nicolaidis 2005). 바꾸어 말하면 유럽인들이 민간외교를 중시하고 군사력을 가능한 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군사력의 사용방식과 효용에 관한 유럽인들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취약한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역설적이지만 유럽의 군사적인 취약성은 유럽인들이 내린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무엇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했는가? 여기에서 그 결정의 이유들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별도의 역사적인 설명을 요하는 과제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Shuehnan 2008).²² 그리고 이와 같이 변화된 인식은 오늘날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진화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통해 군사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꺼리고 결과적으로 단호한 군사력 사용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는데 번번이 실패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취약성을 변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군사력의 사용방식과 효용성에 이와 같이 변화된 인식이 계속 유지되는 한 ESDP와 국제정치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발전전망에 관한 평가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할 때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나토와 유럽연합 사이의 경쟁과 갈등은 지배-견제의 메커니즘으로 인한 충돌이 아니라 군사력 사용의 방식과 효용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가 충돌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 역시 외교안보정책의 수단으로서 군사력 사용에 관한 보다 큰 자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ESDP 등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의도하는 것은 유럽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정립하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 독자성 확보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이다. 경제위기의 도래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현재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이다(Toje 2008a, 28-29; Vasconcelos 2008).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상황의 논리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념적인 이유에서건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유럽의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유럽인들이 더 많은 유럽식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 앞서 나토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이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기대 수준을 대폭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의 프랑스 등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조약안이 부결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리스본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어 '유럽연합 외무장관직'이 신설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물론 장애물도 존재한다. 경제위기는 유럽에서도 심각한 정치, 사회적 여파를 낳고 있다. 확대정책의 결과 회원국 수가 무려 27개국으로 늘어난 것도 단일 행위자로서의 응집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터키의 가입이 성사될 경우 응집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05년 유럽헌법안의 부결을 계기로 유럽의 일반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통합피로감'^{integration fatigue}도 독자세력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와의 관계설정 문제도 지속적인 해결을 요하는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는 전반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주도하고 원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식으로 다소 '불균등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 (프랑스보다 덜 적극적이긴 하지만) 독일이 이러한 선도국가 대열에 설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경우 최근 들어 ESDP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참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에 관한 한 유럽연합보다는 나토에 더 많이 의존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게 유럽연합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안보제도로 인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가 빠른 진전을 보이면서 나토 역시 일정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두 제도 사이의 경쟁과 갈등 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는 나토를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세력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전통적인



나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유럽적인 안보제도의 창출에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등이 EUHQ의 창설을 계기로 유럽연합이 나토의 SHAPE에 버금가는 작전입안능력을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보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군사력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프랑스 등의 의도는 유럽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유럽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현재 계속 불거지고 있는 양 제도 간의 경쟁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유럽연합이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아직 상당하다.

IV. 마치며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미국과 유럽의 이른바 대서양 동맹은 일종의 ‘냉각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전쟁과 나토의 운용방식과 존재이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쉬운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외교 안보정책도 양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진부한 경구에 가깝지만 유럽은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상당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럽은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다. 특히 미국이 자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오랜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다.

따라서 일부에서 예측하듯이 양자 간의 동맹관계가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는 상황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동맹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심각한 경제위기의 발발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2장에서 잠시 지적했듯이, 미국-유럽 동맹은 전통적인 안보이슈 이외의 다양한 안보이슈들을 다루는 다기능 안보제도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다수 유럽 국가들은 나토는 어디까지나 유럽의 안보를 위한 동맹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나토의 기능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안보 그 자체를 위해서도 다양한 안보이슈들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 중 상당수는 아프간 전쟁 등과 같은



이슈들과는 달리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 나토는 이러한 것들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토는 이제 동맹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포기하고 사안별로 참여국가와 추진방식을 달리하는 보다 ‘유연한’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이라크 전쟁 당시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자발적 의지의 연합” coalition of the willing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들 역시 이러한 유연한 방식을 전통적인 동맹의 운용방식보다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토보다는 유럽연합이 유럽안보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믿은 국가들에게 나토의 유연동맹화는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다. 사실 이미 이런 식의 유연동맹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상당히 현실화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한 언론에 실린 기고문에서 나토를 “*alliance à la carte*”(구미에 맞는 음식을 메뉴판에서 고르듯이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협력을 하는 동맹이라는 의미)로 정의한 바 있다(Kissinger 2008). 키신저는 이 용어를 나토의 무능력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사용했지만 사실 유연동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28개 동맹국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28개 국가가 동시에 ‘연루’ entrapment와 ‘방기’ abandonment의 딜레마에 얽히는 그러한 동맹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주(註)

¹ 1991 NATO Strategic Concept.

² 반면 유럽동맹국들 중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군사개입에 유보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았다.

³ 2008년 현재 ISAF 병력의 약 51퍼센트를 나토의 유럽동맹국들이 공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약 44퍼센트의 병력을 담당하고 있다.

⁴ 오히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는 자국 군대의 일부를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⁵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에 배치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군의 전사자 비율은 다른 보다 안정적인 지역에 배치된 병력의 전사자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Sperling and Webber 2009, 507-509).

⁶ 미국 이외에도 영국이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⁷ 1966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독주에 항의하여 프랑스군을 나토의 통합지휘체제로부터 탈퇴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⁸ 이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시절 외교정책분야의 자문역을 담당한 이보 달더Ivo Daalder에 의해 처음 공론화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친민주당계 싱크 탱크인 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보고서에서도 나토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⁹ “Merkel: No ‘global NATO’”. Available at http://www.upi.com/Emerging_Threats/2009/03/27/Merkel-No-global-NATO/UPI-29571238184011/(검색일: 2009 3. 27).

¹⁰ 현재까지도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의 방위비 지출액은 전체 유럽연합 방위비 지출액의 4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¹¹ Elmar Brok, “Statement on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 after the EU summit in Cologne and the transatlantic link,” Nov. 1999, Alistair, J. K. Shepherd, ““A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he EU’: Kosovo and the EU’s international role,” *International Affairs* 85(3), 2009에서 재인용.

¹²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독자세력화와 관련하여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의 설명 역시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¹³ 유럽연합이 주도했거나 주도하고 있는 작전 지역은 소말리아, 기니비사우,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차드, 그루지야, 인도네시아, 그루지야, 아프가니스탄, 마케도니아 등 매우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



- ¹⁴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개입은 인도주의적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 관료에 따르면 다르푸르 개입보다 유럽연합의 성격과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임무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 ¹⁵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현재 다양한 외교정책전통과 이해관계를 가진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공동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의견의 일치와 행동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2년에 처음 도입된 유럽근린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의 경우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 유럽연합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에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는 동유럽 국가들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는 프랑스, 스페인 등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손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¹⁶ 현재 이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 ¹⁷ 적어도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 반면, 소프트파워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위상을 바라보는 경우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준석. 2007.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국제지역연구>. 16(2)을 참조하십시오.
- ¹⁸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는 나토의 Partnership for Peace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 ¹⁹ “EU-NATO Declaration on ESDP,” Dec. 16, 2002.
- ²⁰ 나토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코소보에 병력을 파견한 이외에도 현재 이라크에서 이라크 군대를 훈련시키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의 국방개혁을 지원하며, 지중해 상에서 해상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Operation Active Endeavor)을 담당하고 있다.
- ²¹ 이 경우 ‘유럽 국가들’이란 많은 경우 서유럽 국가들을 지칭한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군사력 사용에 관해 보다 전통에 가까운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²²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독일사 전공사가인 제임스 쉬한(James Sheehan)이 그러한 인식변화



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아쉽게도 그의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는 시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고문헌

- Adler, Emmanuel. 2008. "The Spread of Security Communities: Communities of Practice, Self-Restraint, and NATO's Post-Cold War Trans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4, No.2: 210-16.
- Ash, Timothy Garton. 2005. *Free World: America, Europe, and the Surprising Future of the West*. New York: Vintage Book.
- Barany, Zoltan. 2006. "NATO's Post-Cold War Metamorphosis: From Sixteen to Twenty-Six and Counting."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8, No.1(March).
- Betts, Richard K. 2009. "Three Faces of NATO." *National Interest* March 1.
- Blair, Tony. 1999. "Doctrin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ech delivered to the Economic Club of Chicago, Hilton Hotel, Chicago, April 22.
- Brok, Elmar. 1999. "Statement on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 after the EU summit in Cologne and the transatlantic link before the U.S.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Cologne. November.
- Collard-Wexler, Simon. 2006. "Integration under Anarchy: Neorealism and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2, No.3.
- Cornish, Paul. 2006. "EU and NATO: Cooperation or Competition?" In *Briefing Paper*.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 Daalder, Ivo. and James Goldgeier. 2006. "Global NATO." *Foreign Affairs* Vol.85, No.5.
- Duke, Simon. 2008. "The Future of EU-NATO Relations: a Case of Mutual Irrelevance Through Competition?" *European Integration* Vol.30, No.1: 28-33.
- Edmunds, Timothy. 2006. "What are armed forces for? The changing nature of military roles in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Vol.82, No.6.
- Epstein, Rachel. 2005. "NATO Enlargement and the Spread of Democracy: Evidence and Expectations." *Security Studies* Vol.14, No.1: 64



- European Council. 2003.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European Security Strategy" Document proposed by Javier Solana and adopt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t the European Council, Brussels, December 12.
- Gheciu, Alexandra. 2005. "Security Institutions as Agents of Socialization? NATO and the 'New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9, No.4: 973-1012.
- Hamilton, Daniel., et al. 2009. *Alliance Reborn: An Atlantic Compact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Herpen, Marcel H. van. 2008. "I Say NATO, You Say No NATO." *National Interest* No.95(May/June).
- Hofmann, Stephanie C. 2009. "Overlapping Institutions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Case of NATO and ESDP." *Perspectives on Politics* Vol.7, No.1.
- Keohane, Daniel. 2007. "Fighting to Find a Common Purpose." *EUISS Opinion*, March.
- Klotz, Ulrich. 2009. "Momentum and Impediments: Why Europe Won't Emerge as a Full Political Actor on the World Stage So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47, No.3.
- Kissinger, Henry. 2008. "The debate we need to hav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 7.
- Layne, Christopher. 2008. "It's Over, Over There: The Coming Crack-up in Transatlantic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Vol.45, No.2.
- Markovits, Andrei. 김진웅 역. 2008. <미국이 미운이유>. 서울: 일리.
- Marshall, Will. 2009. "Taking NATO Global." *Memos to the New President*. Washington, D.C.: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MccGwire, Michael. 1998. "NATO expansion: 'a policy error of historic importa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4, No.1: 23-24.
- Menon, Anand. 2009. "Empowering paradise? The ESDP at ten." *International Affairs* Vol.85, No.2: 234.
- Nevers, Renée de. 2007. "NATO's International Security Role in the Terrorist Era." *International Security* Vol.31, No.4.
- New York Times*. 2009. "Europeans Offer Few New Troops for Afghanistan." April 5.
- Nicolaidis, Kalypso. 2005. "The Power of the Superpowerless." In *Beyond Paradise and Power: Europe, America and the Future of a Troubled Partnership*, ed. Tod Lindberg, 93-120. London: Routledge.
- Noetzel, Timo. and Benjamin Schreer. 2009. "Does a multi-tier NATO matter? The Atlantic



- alliance and the process of strategic change.” *International Affairs* Vol.85, No.2.
- Nov, Alistair and J. K. Shepherd. 2009. “A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he EU’: Kosovo and the EU’s international role.” *International Affairs* Vol.85, No.3.
- Ojanen, Hanna. 2006. “The EU and NATO: Two Competing Models for a Common Defense Polic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44, No.1: 62-63.
- Pape, Robert. 2005.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1.
- Peters, Ingo. 2004. “ESDP as a Transatlantic Issue: Problems of Mutual Ambigu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6, No.3.
- Posen, Barry. 2006. “European Uni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Response to Unipolarity.” *Security Studies* Vol.15, No.2.
- Scheffer, Jaap de Hoop. 2009. “Launching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vailable at www.nato.int/cps/en/natolive/opinions_56153.htm.
- Sheehan, James J. 2008.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The Transformation of Modern Europe*. Boston &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 Sjursen, Helene. 2004. “On the Identity of NATO.” *International Affairs* Vol.80, No.4.
- Sperling, James. and Mark Webber. 2009. “NATO: from Kosovo to Kabul.” *International Affairs* Vol.85, No.3.
- Toje, Asle. 2008a. “The EU, NATO and European Defence-A slow training coming.” *Occasional Paper* No.74. Pretoria: The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_____. 2008b. “Consensus-Expectations Gap: Explaining Europe’s Ineffective Foreign Policy.” *Security Dialogue* Vol.39, No.1: 135-38.
- Vasconcelos, Alvaro de. 2008. “Russia and Georgia: European Destinies.” *EUISS Analysis*, August.
- _____. ed. 2009. “The European Security Strategy 2003-2008: Building on Common Interests.” *ISS Report* No.5(February). Paris: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Waltz, Kenneth. 2000. “NATO Expansion: A Realist View.”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21, No.2.
- Williams, Michael C. and Iver B. Neumann. 2000 “From Alliance to Security Community: NATO, Russia, and the Power of Identity.” *Millennium* Vol.29, No.2.



필자약력

김준석 교수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논문으로는 <국가 연합의 재조명: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유럽연합과 규범권력>,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기초>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 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